

올 5월 原電 민간환경감시기구 결성 활동

원전사업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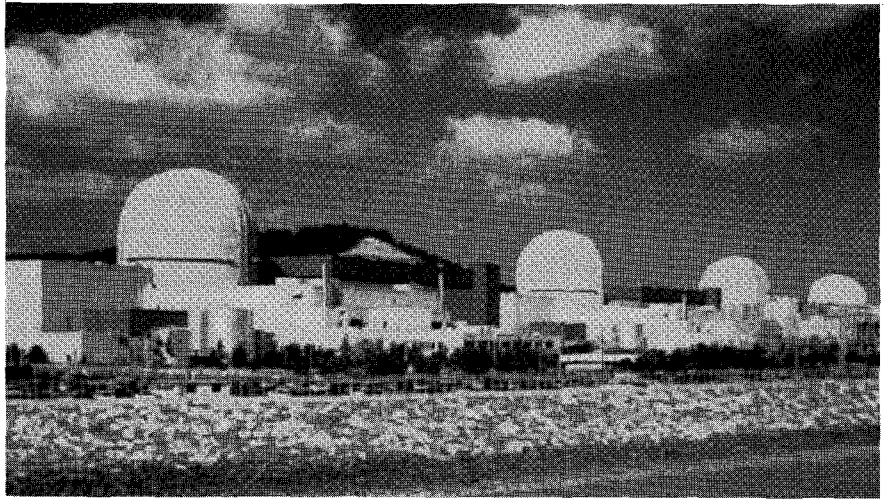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올 5월경 지자체의 주도아래 4개 원전지역에서 모두 결성되며 그 소요예산은 한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감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지역지자체와 협의한 기구 구성안을 지난 2월 중순 확정 발표했다.

이 구성안에 따르면 환경감시기구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감시센타로 구성되며 환경감시위원회는 소관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통산부는 금년 3월까지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기구 운용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5월까지 4개원전지역에 모두 구성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통산부는 영광, 고리, 월성, 울진등 4개원전지역에 동기구의 구성,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금년중 약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동기구의 구성은 원전사업자인 한전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기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지난 93년 이래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직접 원전주변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오며 따라 지난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의 개정작업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본격적인 감

시활동에 들어가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신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한전과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감시업무와 더불어 제3의 민간기구가 독자적으로 환경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원전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구온난화 방지위한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 신설

정부·기업·연구기관등 협조체계 구축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중순 「신정부 출범에 즈음해 환경부를 비롯, 에너지 수급정책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공동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기구가 신설돼 오는 6월까지 정부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대책기구 발족을 계기로 정부, 민간업계,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해 온실가스를 저감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온난화방지 종합대책의 내

용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증진정책, 태양열 등 청정 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정책, 온실가스 배출절감 기술 개발방안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오는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다시 한국과 멕시코 등에 대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조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협상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문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의정서 채택시 일단 제외되었다.

그러나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협약부속서 국가에 대한 개정작업이 예정돼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다시 주요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지금부터라도 금명간 발족된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착실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소비절약 시민감시단 결성 활동

경실련등 15개 민간단체로 구성

에너지소비 억제를 위해 일반시민들이 감시의 불을 켜고 나섰다.

경실련 환경센터,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15개 민간단체 회원 300여명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에너지소비절약 시민감시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의 주요 감시대상은 관공서·공공기관 등 대형건물의 조명실태와 자동차 10부제 운영, 승강기 및 옥외광고물

절전현황 등이다.

승강기의 경우 3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고 4층 이상은 격층으로 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네온사인 등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같은날 일몰(日沒)때까지 사용을 금지시키고 실내온도를 동절기 18~20℃, 하절기 26~28℃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소비절약 시민감시단은 2인1조로 편성돼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특히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계획 확정
집단지너지공급사업등 총 3천337억 투자

정부는 에너지절약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 3천3백37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지역난방, 공업단지 열병합발전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산업체, 건물, 주택등에 설치되는 에너지절약 설비에 대한 융자 자금으로 지원되며, 전년대비 754억원이 증액(29%)된 규모이다.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로 인한 에너지절약투자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범위와 비율등 융자조건도 개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절약투자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단에너지공급 사업분야에 1,780억원을 배정하여 지

역난방 보급사업에 1,460억원,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에 320억원을 지원하며, 절약시설설치분야에 1,557억원을 배정하여 산업체, 건물, 수송부문 및 전기대체 냉방시설설치에 1,145억원,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투자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 지원이 강화되는 분야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절약투자 촉진을 위해 절약전문기업의 투자사업 지원규모를 4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였고, 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측정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등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산업체의 절약투자 지원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하여 최

근의 외환위기에 따른 업체의 절약투자위축을 방지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등에 대비한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뒷받침하고, 제조업에너지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보일러 및 요·로의 노후설비개체를 지원키 위해 지원비율을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고효율자동판매기 등 신규 개발된 에너지절약설비 10개 품목을 지원대상설비로 추가하여 수요자가 동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3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수요자에게 자금추천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보급 확대
올해 총 6백41억원 지원 확정

정부는 올 한해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6백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체에너지 보급자금으로 3백30억원, 대체에너지

등의 기술개발 분야에 3백2억원, 그리고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9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자금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의 추천을 받아 주거은행에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년대비 10%정도 증가된 대체에너지 보급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비율을 소요

자금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등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 세트당 2백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세트당

1백50만원을 지원하여 가급적 많은 수요자들에게 수혜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설치자의 편의를 위해 용자 추천기관의 추천없이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각 지점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도 기술개발 사업에는 총 3백2억원이 지원되는데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분야에 78억원, 고효율 전동기분야 등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에 1백54억원, 기타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술 개발에 7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위해 9억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센터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석유수요 전망 7억4천만 배럴 발전부문 석유소비 전년대비 31% 감소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따른 외환·금융위기, 이로 인한 高油價 기조의 지속등 경제전반에 걸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원유도입량 감소, 정유사들의 석유 정제시설 가동을 하락과 함께 석유수요(내수)도 전년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98년 석유수급 전망'에 따르면 국내 석유수요는 IMF 영향으로 인한 산업활동 위축 지속, 高油價, 에너지소비절약 촉진, 석유발전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의 7억4천8백만

배럴보다 1.1% 감소한 7억4천만배럴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유사들의 원유처리량도 이같은 내수시장 부진과 수출시장 여건 악화등으로 지난해(총원유처리량 8억7천2백만배럴)보다 1.4% 감소한 8억6천만배럴 규모가 예상돼 정제시설 가동율은 9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유 5사의 가동율은 상업정제시설 설비 증가등에 힘입어 96년보다 21.0%가 증가한 총 8억7천2백만배럴의 원유를 처리, 94.8%의 높은 가동율을 보였다.

이같은 내수소비 부진등

국내의 석유시장 여건의 악화로 예상되는 금년도 원유도입량은 지난해의 8억7천3백40만배럴보다 1.5% 감소한 8억6천만배럴 규모에 머물 것으로 통상산업부는 예측했다.

부문별 석유수요는 산업 및 가정·상업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 걸쳐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발전부문의 석유소비는 유류가격의 상승과 타에너지원에 의한 발전량증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지난해(5천6백95만배럴 소비)보다 무려 31.3%가 감소한 3천9백15만배럴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 年内 일반인에 보급

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광발전등 기술지원

달려화 가치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억제해주는 초(超)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도는 3%미만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지출한 외화는 약 3백억달러에 이른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설계기술을 확립, 올해안에 시범건물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전시 보급할 계획이다.

대덕의 연구소 안에 건설될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은 지상 3층에 3백평 규모로 오는 4월 착공되는 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에너지소비량은 m²당 연간 74메가칼로리이며, 우리나라 사무소 건물의 평균 에너지소비량의 2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집열시스템 등 74가지 에너지기술이 동원된다.

연구팀은 기존 각종 에너지 절약 기술을 한데 모으는 한편 최대한 자연의 힘을 활용토록 했다.

건물 남쪽 벽면 전체에는 벽과 1.5m 간격으로 두꺼운

유리벽이 설치된다. 유리벽과 기존의 벽면이 만들어주는 공간은 여름에는 냉방효과를, 겨울에는 난방효과를 높여준다.

유리벽은 건물 북쪽에 난 창문과 어울려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배출시키는 굴뚝효과를 내고, 겨울에는 공기를 미리 데워주는 예열관으로 쓰인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서항석박사는 「이 건물을 위해 수십가지 에너지절약 기술을 동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실용화되지 않은 6가지 기술도 실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연구과제 확정

6개분야 44개과제 81억 투입

통상산업부는 올해 2차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확정, 중점 기술개발분야 등 6개분야 44개과제에 총 81억원(정부 57억원, 민간 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産·學·研·政 인사로 구성된 에너지기술개발심의회를 개최, 97년도 2차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연구과제로 중점 기술개발, 일반기술개발, 특정화사업등 6개 분야 44개과제에 총 81억원을 투자키로 확정했다.

특히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중점기술개발 분야의 17

개과제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산부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총 3백72개 과제에 1천3백26억원을 지원해 산업용 축매연소기기등 23개를 상용화해 1천3백억원의 수입대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추가로 6억여원을 들여 에너지 절약기술로서 범용성과 보급잠재량이 우수한 산업배열 회수용 동력사이클시스템의 개발·작용연구, 감압을 이용한 폐유의 에너지재활용시스템, 정밀화학공정의 냉각시스템 최적화 기술 등 3개 과제를 에너지절약 시범적용사업(ECDP) 계속과제로 선정·실용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국내 에너지소비 전년대비 2.9% 증가 전망

82년 석유파동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올해 국내 에너지 소비는 180백만toe로 전년대비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소비는 저성장, 환율변동에 따른 에너지가격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에너지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증가율은 82년 석유파동에 따른 0.2%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서, 특히 에너지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류가 수송부문과 발전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1.1%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둔화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부문별로 보면, 수송부문은 석유류 가격 상승 및 경기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전년대비 1.1% 감소할 것

로 예상되는 반면, 산업부문은 석유화학산업의 호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3.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에너지수입액은 250억달러로 전년대비 8.0% (2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도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175백만toe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96년(9.8%)에 비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추세로 경기둔화 및 에너지가격 인상,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추진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에너지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며, 특히 석유류(6.5→3.8%)와 유연탄(17.9%→9.1%)이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둔화세를 주도하였다고 통상산업부는

밝혔다.

또한 작년도 에너지수입액은 271억달러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는데, 이와같이 에너지수입액 증가율이 에너지소비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원유수입이 석유제품 수출 호조로 물량 수요가 크게 증가(20.9%)하고, 아울러 油價가 소폭 상승(1.1%)함으로써 전년 대비 22.3%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설비증설로 석유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석유제품 수입액은 16.0% 감소하였고, 석유제품수출액은 40.0% 증가한 52억달러에 달함으로써 에너지 순수입액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219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올해 국내 무연탄 소비량 4백15만톤 전망 전년도 대비 11.8% 증가 예상

올해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전년동기의 4백51만2천톤보다 2.5% 감소한 4백40만톤이며, 소비량은 전년동기 3백71만톤보다 11.8% 증가한 4백15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 무연탄 재고량은 9백98만9천톤으로 전년동기의 9백79만3천톤보다 19만6천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가 최근 발표한 「98년 국내 무연탄 수급전망」에 따르면

IMF체제 이전 매년 약 10% 정도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탄 생산량이 최근 환율폭동에 따른 기름값 인상으로 감소 추세가 둔화, 올해 무연탄 생산량은 2.5% 감소에 그친 4백4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또 소비량은 전년대비 무려 11.8% 증가한 총 4백15만톤 규모로 발전용의 경우 전년대비 6.4% 증가한 2백50만톤, 연탄용의 경우 전년대비 17% 증가한 1백60만톤, 산업용의 경우 6.6% 증가한 5만톤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는 IMF체제하의 일시적으로 무연탄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비축탄(약 6백만톤 규모)을 방출, 수급 조절토록 할 방침이다.